野5당-시민단체 연대 움직임 본격화

"지방선거서 MB정권 심판하겠다"

"선거연합 넘어 지방공동 정부 구축" 제안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5당 대표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 추진을 위해 공동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4개가 참여, '5+4 모임'으로 불리는 이 모임에는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국민참여당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또 '희망과 대안'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시민주권모임 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고문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 준비위원회 측은 이날 간담회 후 "참석 원로들은 5당 대표들에게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5당이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면서 "야 5당 대표는 1월부터 지방선거 공동 대응에 관한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 적극 검토,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부터 지방선거를 공동대응하기 위한 가능성과 조건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달 중 5차례 정도 실무협상을 갖고 선거연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 5당 대표와 시민사회 원로들을 초청한 백 명예교수는 "올해의 지방선거를 제대로 대처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수의 국민 마음은 이미 정권을 떠났다. 2010 연합 정치는 단순한 지방선거 전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정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고, 이기면 모두가 이기는 심정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한나라당에 집중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상황에 통합과 연대의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강 대표는 "국민께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창조한국당 송 대표는 "앞으로 민주개혁 진보세력과 정책 모두를 아우르는 선거 연합의 틀을 만드는데 앞장설 용의가 있다"고 각각 밝혔다.

진보신당 노 대표는 "지금 연대를 얘기하지만 양적 변화만이 아닌, 질적 변화가 수반돼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국민참여당 이 위원장은 "단순한 선거 연합을 넘어 지방연합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각각 제안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선거 연대가 성공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당 위주로 큰 틀에서의 범야권 통합이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군소 야당들은 평등한 형태의 정책과 노선의 연대를 우선 과제로 꼽는 등 방식과 인식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순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은 12일 오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희망과 대안'이 여는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거연합은 일자리·교육·서민경제·환경·지역균형발전 등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도 13일 '광주 희망과 대안'이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 참여운동을 시작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2010 희망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오종렬 한국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대표, 김상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해찬 시민주권모임 대표,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화순 민간단체 "돈 선거는 없다" 공명선거 운동

○…화순군의 30여 민간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돈 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황제, 상임대표 조기석 목사·정타 스님·박승일 화순초등학교 총동문회장)는 오는 16일 화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추진위는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돈 선거로 인해 2명의 군수가 도중하차하고, 최근에는 모 농협조합장이 금품선거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군의원과 조합장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재정적 몰락과 파탄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불행을 막기 위해 돈선거를 추방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거절 ▲매표행위 거절 ▲대가성 있는 자원봉사자 거절을 선언하고, 특히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는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다짐했다.

이탁우 도의원 보성군수 출마

○…전남도의회 이탁우(보성 2) 의원은 1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군의원,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보성군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군정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벌교제일고교 체육관에서 '발은 태자리에 붙이리라'란 제목의 자전 수필집 출판기념회를 한다.

문상필 이사장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문상필 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이 12일 광주시의원(북구 3)출마를 선언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오랫동안 지역사회 복지활동과 함께 광주시 산하 기관에서의 행정경험, 정치활동, 교수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광주·사회복지가 바로 선 광주·인재육성을 통해 사람이 희망인 광주·소통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신 있는 정치, 공부하는 정치, 비전을 만드는 정치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선관위 '선거아카데미' 개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및 선거운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무료로 개설·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남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후보 준비·선거운동 준비 및 전략·선거공약과 선거홍보물 작성·선거캠페인 기법 등을 내용으로 사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선관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가 초청된다.

세부 일정은 ▲19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별관 대회의실 ▲20일 오전 10시 목포 시민문화센터 소공연장 ▲21일 오전 10시 나주 동신대 국제회의관에서 열린다.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본격 활동

○…작년 12월19일 창당한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세연)이 새해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당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참여당은 지난 11일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전국 창당준비위 리더십 센터와 홍보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운미팅(town-meeting)과 당 컨셉찾기 순회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는 당직자들과 당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국민참여당이 정치활동에서 토론과 소통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타운 미팅 진행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각 구 지역위원회별로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가 한창 진행중이며, 중앙당은 오는 1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창당한다.

/최권일·김지을기자 cki@kwangju.co.kr

정동영·신건·유성엽, 민주당 복당 신청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12일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을 위한 '큰 그릇 민주당' '대동(大同)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복당 신청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복당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4월10일 4·29 재보선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지 9개월여 만에 '친정'에 복귀하게 된다.

정 의원은 이날 복당 신청서를 내며 발표한 성명을 통해 "통합과 연대는 지금 이 순간 민주개혁세력의 절대적 책무"라면서 "재보선 기간 당에 부담을 준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정치적 이유를 떠나 인간적으로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잠시 옷을 벗었지만 다시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며 "백의종군 자세로 가장 낮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건(전주 완산 갑), 유성엽(정읍) 의원 등 나머지 호남 무소속 의원 2명도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정 의원과 신 의원의 경우 탈당한지 1년이 안 돼 복당이 확정되려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무위를 열어 복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달 내로 정 의원 복당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면 지방선거 공천권과 차기 당권경쟁 등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당내 역학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도 이른바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상당수 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어 향후 호남지역 공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진통'

산정방식 등 놓고 여야 입장차 팽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1월 시행을 위한 관련법 심의에 들어갔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CL 도입과 등록금 상한제 병행 도입 등의 내용을 논의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여야의 쟁점은 등록금 산정방식 및 형태, 물가상승률의 연계 범위, 한국장학재단 재원 마련 방안 등 3가지였다. 우선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이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적정 등록금을 산정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평균 고등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했다.

또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1.5배를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상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이종걸 위원장이 갑자기 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아니한 안을 가져왔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